

2006년 축산정책 추진계획

2006. 2. 17

농 립 부

“함께가꾼 우리농업! 함께누릴 푸른미래!”

목 차

I. 축산정책 추진상황 및 여건	1
II. 정책 목표 및 추진 체계	5
III. '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축산물 고급화 및 유통개선	6
2. 축산물 안전성 확보	14
3.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18
4. 선진 방역체계 구축	28
5. 한·미 FTA 대책	31
6.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	33
7. 낙농산업발전대책	36
8. 가축공제사업 활성화	38
9. 축산물 수출확대 추진	41
10.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43
11. 축산물 수급안정 추진	46
IV. 관련 법률 제·개정	49
V. 성과지표 및 추진일정	51

<붙임> 축산국 일반현황

I. 축산정책 추진 상황 및 여건

1. 추진 상황

□ UR협상에서 축산물은 타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로 개방

○ 돼지고기, 닭고기는 '97년에 각각 33.4%, 30.5%, 쇠고기는 '01년에 41.4%의 관세로 수입 자유화

○ 다만, 일부 유제품은 '04년까지 시장접근물량(MMA)을 허용하고 고율관세 유지(탈지·전지분유 176%, 버터 89%)

⇒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

□ '94. 6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이후 축산농가의 전업화, 유통개선, 품질고급화 등을 중점 추진

○ 생산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지원 및 가축공제사업 도입('97)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 등 도축장·가공장의 위생·안전성 수준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

○ 가축개량사업 본격화, 축산물 등급판정제 도입('93),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

□ 최근 품질 고급화, 안전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축산 및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

○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 '00년 이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2. 축산업의 변화된 모습

□ 상당 폭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생산기반을 유지

○ 자급률('95→'04) : 쇠고기 51.3%→ 44.2, 돼지고기 94.5%→ 84.9, 닭고기 97.9% → 90

○ '04년 축산업생산액(10조8,399억원)이 농림업생산액(37조2,886억원) 중 29%를 차지하고 쌀생산액(9조5,564억원)을 추월

□ 한우, 양돈, 양계 등 주요 축종의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

○ 축산전업농 사육비중은 '95년 42.3%에서 '05년 73.4%로 증가

○ 축산농가의 성장에 따라 의무자조금 조성 시작('04 양돈, '05 한우)

〈축종별 전업농 현황('95 → '04)〉

축 종	전업농 농가수(비중)		전업농 사육규모(비중)	
한육우	2,458호(0.5%)	⇒ 5,483(2.9)	206천두(8%)	⇒ 551(33.1)
젖 소	1,325호(5.6%)	⇒ 4,501(46.8)	98천두(17.7%)	⇒ 344(69.2)
돼 지	1,113호(2.4%)	⇒ 2,868(21.6)	2,360천두(36.5%)	⇒ 6,706(75.3)
산란계	357호(12.5%)	⇒ 496(24.3)	23,515천수(50.8%)	⇒ 33,692(65.5)
육 계	306호(12.0%)	⇒ 807(50.2)	12,518천수(37.8%)	⇒ 40,174(80.2)

* 전업농 : 한우·젖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이상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진전(양극화 심화)

○ 쇠고기1등급/돼지고기A등급 출현율 : ('95)12.8/6.3%→('05) 47.9/37.1

- 한우 3등급 대비 1등급 가격비 : ('01) 121.5 → ('03) 138.6 → ('06.1) 153.7

○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중('03→'05년) : 한우 17.4→29.5%, 돼지 41.4→47.7

○ '04년 10월 한우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 적용 실시

□ 축산물의 안전성은 '98년 이후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를 농림부가 일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비자들의 평가

○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등 위생·안전성 제고 기반 확충

- HACCP을 도축장('98), 가공장('00), 사료공장('05) 등에 적용

○ 그 결과, 축산물안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식육중 일반세균수 : ('97) $10^{5-6}/\text{cm}^2 \rightarrow$ ('04) $10^{2-3}/\text{cm}^2$ 으로 100배 개선

- 미생물검사 위반율 : ('97) 3.4% $\rightarrow$ ('04) 0.47으로 7배 개선

□ 축산업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완화 노력 경주

○ '04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도입 및 '05년 축산업등록 완료

○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을 마련('04.9)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05.12)

○ '04년 경종과 축산간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 확산을 위해 「자연순환농업팀」을 발족, 운영 중

□ 구제역 등 전세계에 만연한 악성 가축질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구제역은 '00년, '02년 발생 이후 청정국 지위 유지

○ '03년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3개월만에 종식한 이후 인근 국가와는 달리 현재까지 미발생

○ 예방접종으로 뉴캐슬병, 돼지콜레라 등 발생률 감소

3. 축산정책 여건

□ 전업화, 규모화 등이 진전되고 개방화 체제에 상당히 적응하였다는 점은 강점

○ 축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추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지출 증대 등은 축산업 발전의 기회요인

- 1인당 육류 소비량 : ('90) 19.9kg → ('04) 31.3 → ('13년 P) 39.2

□ 시장개방 확대, 특정지역 가축 집단 사육, 가축질병 지속 발생 및 수급 불안 반복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특히, 캐나다·미국 등 축산 선진국과 FTA 체결은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

- '03.12월 광우병(BSE) 발생 이후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시 국내 한우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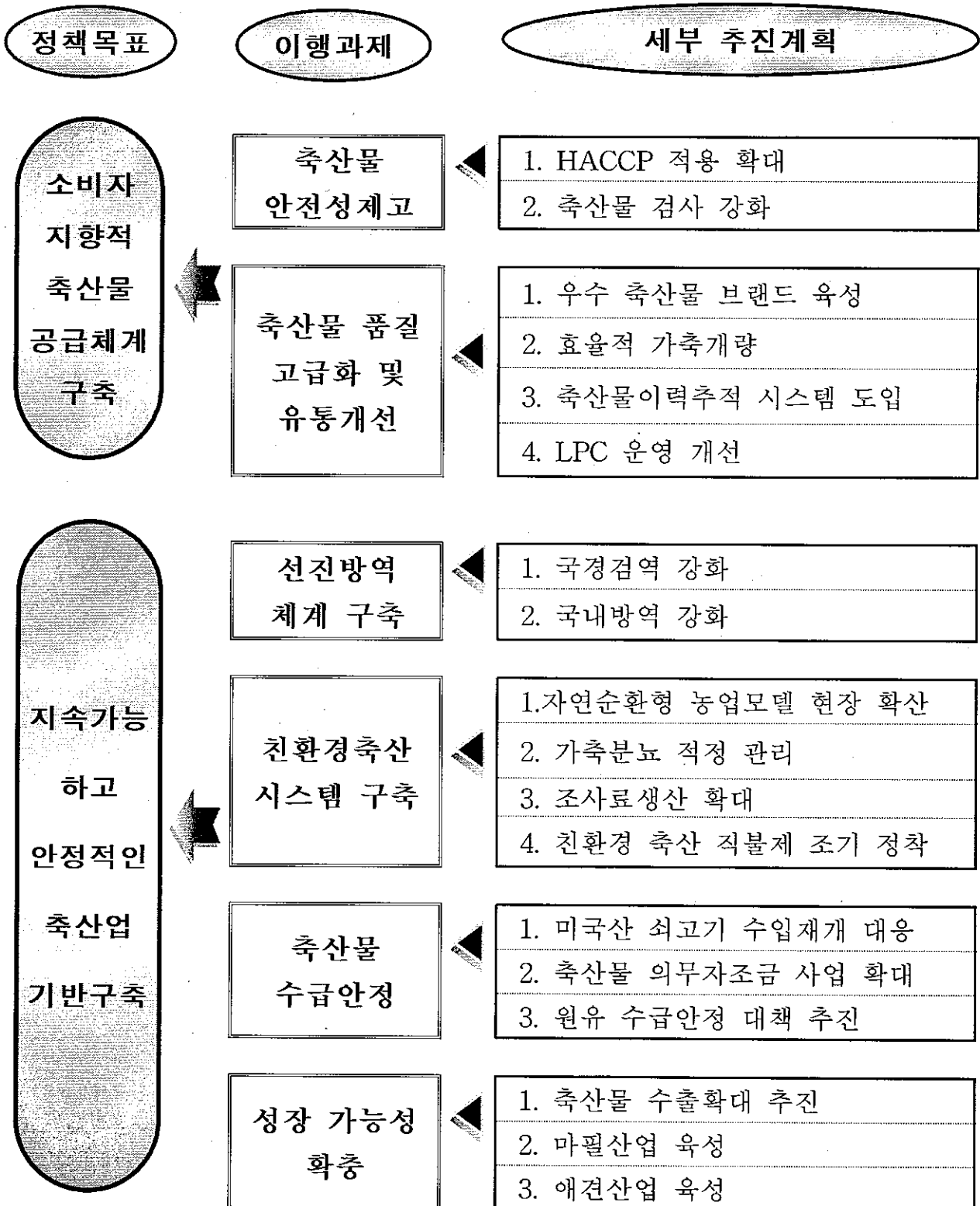
○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

○ 동남아, 중국 등 방역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질병 유입 우려

○ 수급불안에 생산자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미흡

Ⅱ. 축산정책 목표 및 추진 체계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Ⅲ. '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축산물 고급화 및 유통개선

가. 축산물브랜드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 우수 브랜드경영체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점 육성
 - '04~'05년에 총 49개 경영체(한우 29, 돼지 20)에 브랜드경영자금, 브랜드컨설팅,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을 지원
 - 축산물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배부(한우·양돈 각 1,000부)
- ☐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04년부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브랜드인증사업 추진
 - 인증브랜드 : '04년 18개(한우 8, 돼지 10), '05년 25(한우 13, 돼지 12)
- ☐ 그러나 시장에서 인정받는 축산물브랜드는 아직 소수
 - 대부분의 브랜드가 품질 균일성, 규모화 등 요건에 미달
 - 소비자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실정임
 - 인지도 조사결과 : ('04) 18% → ('05) 20.8% (한국갤럽조사)

'06년 추진계획

- ☐ '04~'05년간 49개 브랜드경영체 선정에 이어 '06년 30여개를 추가 선정, 총 80여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13년까지 사육두수 중 한우 50%, 돼지 70% 점유 목표)

-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자금 지원('06 : 932억원)
 - 지원받은 경영체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 지원('06 : 300억원)
 - 한우 번식우 5두 이내의 영세농을 준회원으로 참여시켜 소규모 농가의 **브랜드 참여기회 확대**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브랜드경영체 사업평가지 소규모농가 참여 및 지원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
 -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 강화**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
- 한우, 돼지에서 육우, 육계까지 인증대상에 포함
 - HACCP 수준이 높은 도축장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
 -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개최(9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브랜드경영체간 또는 지역간 통합으로 **광역브랜드 조성 유도**
- 순한한우(전남), 하이록(강원), 한우람(경기) 등과 같은 광역브랜드가 확산되도록 유도
 - 광역브랜드사업체의 회계와 조직 등이 회원법인과는 구분되도록 유도하고, 브랜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우선 지원

나. 효율적 가축개량

현황 및 문제점

□ 중장기(5년·10년)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추진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

○ 한우·젖소의 개량 및 검정, 정액 보급 지원

- 보증씨수소를 선발, 우량 소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

· 보증씨수소 선발(연간) : 한우 20두, 젖소 7두(국내산 2, 도입 5)

· 국내산 소정액 공급계획 : ('06) 2,000천str(한우 1,560, 젖소 440)

○ 돼지·닭은 민간업체에서 종축개량 및 검정사업 실시

- 종돈업 134개소, 정액처리업 57, 수정소 1,467, 종계업 269, 부화업 175

※ 가축개량 예산 : ('04) 223억원 → ('05) 230 → ('06P) 273

□ 현재의 가축별 개량목표는 '01년에 설정한 것으로서 평가·분석하여 수정 필요

지 표	'95	'04		
		계 획	실 적	%
한우 18개월 체중(비거세)	491.3kg	550.0	542.2	99
젖소산유량(305일)	5,836kg	7,720	8,019	104
돼지 사료요구량	2.39kg	2.20	2.17	101
산란계 연간산란수	286개	292	320	110

□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간 가축유전자원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종축을 외래품종과 수입에 의존

○ 국내 고유 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필요

'06년 추진계획

- 지난 5년간 축종별(소·돼지·닭) 개량 성과를 분석, 개량 목표를 조정(2010년 목표는 수정하고, 2015년은 새로이 설정)
 - 소비자의 기호변화, 개량대상 형질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위주에서 품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육종과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축산업발전방안 마련
 - 가축의 유전자원(종축·재래가축) 보존·이용을 위한 동물유전 자원센터(Gene Bank) 설립방안과 종축업 관리개선 등을 검토
 - ※ 3개분야(가금·종돈·유전자원팀)로 나누어 4월까지 대책 마련
- 한우 육종농가를 이용한 씨수소 및 고능력 암소 선발체계 구축
 - 한우 육종농가를 지원하여 보증씨수소 선발
 - 육종농가 : ('06까지) 23개소(농가 20, 도센터 3) → ('08목표) 40
 -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 내실화(80천두)
- 젖소 검정 확대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 촉진
 - 자율적 참여 유도로 검정률 향상 : ('05) 49.8% → ('06) 55%
 - 젖소 보증씨수소 도입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후보씨수소 생산(연 20두)
- 돼지·닭 검정시설 확충 및 개량대상 가축 확대
 - 종돈검정소를 청정지역으로 이전 확충(1개소)하고 오리를 개량대상가축에 추가하여 혈통관리와 검정 실시(상반기)
 - 종계 능력검정은 검정소·농장 검정을 병행하면서 원종계 농장(GPS)·종계수입농장의 검정 참여를 확대

다. LPC 운영개선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 LPC) 사업 추진('94~'01, 7개소)
 - LPC를 중심으로 생산, 도축, 가공, 판매의 일관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본래 정책취지 달성을 위해 다양한 LPC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지원('05.6)
 - 상위등급 0%, 중위등급 3% 금리 차등지원(52개소, 578억원)
 -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도축장 신규건설 억제 추진
-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LPC의 도축가동율 및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정상화는 미흡
 - 건설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담과 도축장과의 물량 확보 경쟁, 위생설비 유지비용 증가 등 원인
- 사육두수에 비하여 도축능력이 과다하여 도축장 가동율 저조
 - 위생수준이 높은 LPC 등이 일반도축장에 비하여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
 -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의 수수료 현실화 필요

'06년 추진계획

□ LPC 경영 환경 개선 지속 추진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과 경영상태(계열화비율, 도축물량, 가공비율, 손익)를 병행 평가한 후 운영자금 차등지원('06예산 637억원)
- 양돈 계열화사업 및 브랜드사업에 참여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
- 소비자 초청 LPC 현장견학 등 홍보 강화

□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유도

- 도축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2개소 이상 도축장 통폐합시 자금 지원('06년 70억원)
 - 폐업 도축장 부지의 타용도 전환이 쉽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HACCP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도축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부과

□ 축산물 판매시 이용 도축장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확인 후 구매토록 하는 실명제 도입

-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은 위생수준에 상응하는 도축수수료 징수 가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및 축산물 표시기준(고시) 개정

라.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04.10월부터 9개 우수브랜드가 참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참여 두수 및 사업장('05.12) : 한우 59천두 등록, 도축장 13개소, 가공장 13개소, 판매장 30개소 지정
 -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되는 쇠고기는 7~10% 정도 비싸게 팔리는 추세
-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대상이 제한적이고 고급육 중심이어서 아직 전체적인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성급
 - 다만, 소비자의 반응이 좋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06년 추진계획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 시기를 1년('09→'08) 앞당기기 위해 시범사업 대폭 확대 추진
 - 소비자의 안전성 중시 성향을 반영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도 대응
 - 전면 실시시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보완을 위해 '06년 사업 대상에 지역단위 포함

- 참여대상 : ('04~'05) 9개 브랜드, 59천두 → ('06) 14개 브랜드
및 3개 市(경기 파주, 전북 김제, 경남 김해), 100천두
- ※ 3개 지역은 도별 신청을 받아 사육 및 유통기반, 지자체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선정 완료('05.10)
- 지자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와 지역단위의 **연계 사업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음식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유도**
- 판매장을 2배(30→60개)로 늘리고, 음식점 신규 참여 유도
- '07년도 대상 지역 **확대**(도별 3~4개)와 **육우 브랜드**(2개소)를
사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완료(10월)
- 총 참여대상 : ('04~'05) 9개소 → ('06) 17 → ('07) 50
- '08년 하반기 전면 실시에 대비, 조직 구성 및 법령 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
- 귀표 탈락 등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1월)
- 주관기관 등 사업추진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 등 제도정비
방안 마련 연구용역(2~10월)
- DNA(유전자) DB 구축 및 검사방법 표준화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해 산·학·연 합동으로 공동 연구사업 수행('05~'07)
- '07년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2~12월)
- 豚群(herd) 식별번호 부여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2. 축산물 안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04.7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대책」을 수립,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축산물 관리체계의 기본 틀 마련
 - 사육단계 :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항목(123종) 및 사료내 유해물질(78종) 기준 설정,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수 감축(53종→25종)
 - 도축·가공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
 - '03.7.1부터 소·돼지·닭 도축장(162개소)에 HACCP 의무 적용
 - * HACCP 적용이후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 10^{5-6} 에서 10^{2-3} 수준으로 개선
 - 가공장은 자율적용 : '05.12월 현재 264개소가 HACCP 운용
 - 유통단계 : 냉장 유통체계 정착 및 수거검사 실시
 - 수입축산물가공품 위생검사실시 (전체 수입건수의 16% : 연간 2,000건)
-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과다 사용, 휴약기간 미준수 등 사례
 - '04년의 경우 120천건 조사에서 위반 290건 발생(위반율 0.25%)
 - * 잔류위반율 : (미국) 0.73%, (영국) 0.24%, (일본) 0.05%, (호주) 0.21%
 - HACCP 적용으로 도축장·가공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보관·운반·판매단계의 위생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

‘06년 추진계획

□ 사육단계 : 농가 교육 및 사료·동물약품 관리 강화

○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사육단계에 HACCP 적용 점진적 확대

- ‘06년 돼지사육단계(브랜드참여농가, 친환경 축산농가 등)에 HACCP 시범적용(10개소)
- HACCP 적용 희망 농가에 컨설팅 실시(06예산 : 225백만원)
- 젓소(‘06년 시행)·한우(‘07년) 등 HACCP지침 및 적용 매뉴얼 개발

○ 농가의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 상반기(5월) 및 하반기(10월)에 5개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감수성 약제사용 등 홍보물 배포
- 생산자단체, 동물약품업계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78명)’ 운영 활성화(분기별 1회 모임)

○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위반농가 명단 공개, 규제검사 기간 연장, 과태료(100만원) 부과 철저
-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05.11.8) 및 운영

○ 사료공장 HACCP적용 확대 : (05년) 24개소 → (06년) 40개소

- 사료내 중금속, 살모넬라균,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
-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연간 사료 검사 면제, 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도축·가공단계 : 미생물 등 검사 강화 및 HACCP 적용 확대

○ 도축장 HACCP 운용 내실화 추진

-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실제 운용 여부 등 점검
 - 시·도별 자체 점검 또는 시·도간 교차 점검 (6월)
 - 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
- 도축장 HACCP운용수준 평가('06.5~11월간 평가, 12월중 발표)
 - 평가 후 등급을 부여, 정책자금 차등 지원(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 '06예산 637억원)

○ 축산물 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 HACCP지정 가공장 : (05년) 264개소 → (06년) 300개소
- 군납, 집단급식 등에 HACCP제품 우선 사용 협조 요청(연 2회)
- HACCP적용 가공장에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06예산 : 500억원)
- 정부 미지정 축산물가공장 HACCP 명칭 사용금지 제도 단속 강화

○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강화

-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10천건→13천건), 대상물질 확대(80종→83)
- 오리, 양(산양포함) 전문 도축장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사 추가
- 광우병 대책과 연계, 도축검사 내실화를 위해 도축검사관, 검사보조원 배치 (130명) 및 교육 강화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

- 계란, 오리알의 미생물·잔류물질·부패·변질란 검사(06년 :1,710건)

□ 유통단계 : HACCP 도입 및 위생감시 강화

○ 판매장 HACCP적용 모델 개발·보급 및 지정 확대

- 식육판매장 유형별 적용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 및 보급
- 리후렛 등을 통한 홍보 및 HACCP 운용 준비업체 컨설팅 지원
- HACCP 지정 확대 : (05년) 2개소 → (06년) 8개소

○ 보관·운반단계 HACCP적용을 위한 지침 제정(11월말) 및 보급

- 외국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제정 (연구용역)
- 지침 제정 내용의 HACCP 적용 업체 교육 실시

○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수거검사 물량을 상향 조정)

○ 닭·오리고기 지육·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

-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은 '07년부터, 8만수 미만은 '08년부터 시행
- 연말까지 표시기준, 포장단위·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업체 교육·홍보 등 현장 사전준비 시행

○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관계부처와 협조, 내년 1월 시행(영업장 면적 300m² 이상 규모)에 차질 없도록 입법 추진
- '06년에는 농협·생산자단체와 협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자율 적용 확산 추진

○ 사육단계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전단계 HACCP도입에 따른 관리기구 설립 추진(가칭 사단법인 한국축산물HACCP기준원)

3.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가.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모델 현장적용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 농업은 그간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에 많이 의존
 - 염류 집적에 의한 작물 생육 저하 및 자연생태계 악화 우려
 - ☐ 최근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지속농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
 -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증대
 - ☐ 그러나 가축분뇨 퇴·액비는 악취, 품질 및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화학비료보다 불리하여 경종농가의 확대이용 부진
 - 액비는 경제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로 사용 기피
 - ☐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통해 경종·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모델 구현 미흡
 -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확산시킬 필요
- ※ 파주축협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순환 농업 추진('05.11)

'06년 추진계획

□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지역별 특화된 자연순환농업 추진

○ 자연순환농업 추진 조합에 퇴·액비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07년 400억원, 연리 1.5%)

○ 농경지를 확보, 퇴·액비를 살포하는 민간 업체도 지원

- 수거, 운반 및 살포장비를 자체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 살포비 지원

※ 대상자 : 300ha이상 살포면적 또는 10천톤 이상 액비 확보 업체

□ 자연순환농업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 농협중앙회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신설, 회원조합 등 지도

- 시도, 시군지부에도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협조체계 구축

○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

- 농업 단체, 지자체 등과 연대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자연순환 농산물 판촉활동(장터개설 등) 지원

□ 퇴·액비 처방서 제도 활성화

○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퇴·액비 처방기준을 개정하고 퇴·액비 전용 처방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농·축협도 퇴·액비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 발행 확대

- 퇴·액비 처방서는 반드시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후 발행하도록 하고, 살포조직에 대해 처방서를 꼭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 지역별 퇴·액비 시범포 운영 확대

-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에서 지역별 중점 작물 재배 시범포를 확보·운영
 - 각 시범포의 재배결과를 분석·정리하여 퇴·액비 처방기준을 보완하고 작물별 재배 적지 기준 설정(농진청)
- 시범포 단위로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경종농가의 인식 개선
 - 시범포 운영 우수기관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 표창 및 시상

□ 자연순환농업 교육·홍보 강화

- 자연순환농업을 주제로 심포지엄, 지역토론회/순회세미나 개최
 - 지역 생산자대표, 교수, 농가 등 관계전문가와 순환농업 발전방안 토의
- 자연순환농업 실천 경종·축산농가 우수 사례집 발간·보급
 - 자연순환농업 실천 50농가 선정(양돈 20, 한우 10, 젖소 10, 닭 10)
- 경종농가 대상 자연순환농업 교육과정 개설(농업연수원, 농진청)

< 자연순환농업 추진 우수사례(파주축협) >

- ◇ 경종농가(약산위탁영농조합)와 사료포 보유 축산농가간 협약을 체결
 - 축협에서 양돈농가의 분뇨를 수거(7천원/톤)하여 액비저장조에서 부숙시킨 후 협약 농가에 액비무상 살포
 - '04년 액비살포 실적(살포면적 : 132ha, 살포량 : 3,537톤)
 - 퇴·액비처방서를 준수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곧바로 경운
 - 축협에서는 수확한 쌀을 직영판매장 및 인근조합에 판매 알선
- ※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탄현농협과 자연순환농업 협약 체결('05.11월)

나.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가축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05년 기준)은 50,593천톤(1일 139천톤)

* 축종별 구성비 : 한우 19.2%, 젖소 15.7, 돼지 55.6, 닭 9.5

- 돼지분뇨 발생량 : ('92) 17백만톤 → ('97) 22백만톤 → ('05) 28

○ 가축분뇨를 포함한 전체 비료 공급량이 토양(농경지)의 양분(질소, 인산 등)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

- 전국 평균 양분공급량은 수요대비 질소 112%, 인산 126%

□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일부 위탁처리

○ 규제대상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액비로 자원화(80% 수준)하거나 정화 처리(3% 수준)

- '91년부터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 지원

○ 위탁처리는 공공처리(2,300천톤/년, 4.5%), 해양배출(2,700천톤, 6%), 부산물비료업체 등 퇴비공장 제품화(3,300천톤/년, 7%)로 처리

○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해수부에서 국제협약 등에 따라 해양배출 기준 강화 및 물량 감축 계획

- 해양배출량 : ('97) 52천톤 → ('00) 765 → ('02) 1,626 → ('05) 2,745

※ 어민, 환경단체 등에서 '08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요구중

□ 사업대상자가 인·허가, 시설설치 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원된 시설 관리 미흡

'06년 추진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적정 처리를 위한 자금지원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설치자금 지원 확대(341억원)

- 해양배출 물량 감축에 대비, 기존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분뇨 분리시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 우선 지원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목표 : ('05) 2,745천톤 → ('11) 970

- 농가의 해양배출기준 준수 유도를 위한 분뇨 분리시설 추가 지원
(농가지원 한도와 관계없이 1회 추가 지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 중 단독·공동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시설지원보다 **이용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 구축 검토

- 지자체 중심의 지원으로 해당 지자체 책임하에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체계 구축

□ 농가 설치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 점검 강화

○ 농가 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2,700여 개소) 활용실태를 점검, **가동불량 시설의 활용도 제고**

○ 액비살포비가 지원되는 지자체의 액비살포 현장을 점검하여 살포시 문제점 등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정착촌(71개소)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가동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개선 방안 마련

□ 농림부 주관으로 교육·홍보 및 컨설팅 강화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4~5월중) 및 농업기술 센터를 활용,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정책과제 토론, 정보제공 등 현안사항 대응 및 자문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2~3월중)
- 민간 제안 우수 액비 살포시스템 선정·보급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 시군별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07시행), 퇴·액비 살포방법, 유통협업체 운영 등
- * 축산연, 농협, 양돈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운영
- 액비 살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환경부 협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에 가축분뇨가 포함되도록 추진

□ 적정 가축분뇨 발생을 위한 사전관리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방안 구체화 추진
 - 시·도, 생산자 단체 등과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시 지자체 중심의 공동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가축밀집사육지역 축사이전을 위한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사업 추진(5개소, 38억원)
- 축산업등록제에서 정한 두당적정 사육면적('07.1.1시행) 준수 유도
 -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면적 준수를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고유가 및 환경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 OECD국가의 대체에너지비중 : ('93) 3.9% → ('10) 4.7% 전망
 - 국내 총에너지중 '06년 3%, '11년 5% 대체에너지 공급목표
-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비용절감과 환경부담 경감 및 에너지 대체효과를 함께 달성 가능
 - 경제성 있는 최적시스템 및 규모에 대한 검증 미비, 가스 발생량 증대 및 폐액처리의 기술적인 어려움

'06년 추진계획

- 민간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 국내외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분기별 1회)
 - 경제성을 갖춘 적정 모델 제시 및 가스발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혼합 원료(음식물쓰레기 등) 선정
- '07년 바이오가스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
 - 농가형은 1500두 내외의 5~6개 농가를 선정, 15억이내 범위에서 지역여건과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생산시설』을 구축
 - 공동형은 '07년 농가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
 - 가스발생, 전기생산, 전기이용의 단계별 문제를 사전에 검토

라. 친환경축산직불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04년부터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친환경축산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추가 비용 또는 소득감소분의 50%를 직불금으로 지급
 - 실적 : ('04) 512호, 2,937백만원 → ('05) 653호, 4,382백만원
- 축사 및 사료포 여건이 나은 농가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축사주변 악취·해충, 연말 예산 편중집행 문제 등 개선 필요

'06년 추진계획

- '0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3년차 시범사업(900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58억원)
 -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과 연계하여 사료용 총채보리·호맥 파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
 - 축사주변 악취·해충 방제를 위해 환경개선제 구입비용의 50%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포함 지원(농가당 100만원 한도)
 - 조경수 식재 인센티브 지원한도를 축소 (종전 200만원 → 100)
 - 연말에 1회 지급하던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참여농가의 경영개선 유도
- '07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04~'05 기간중 시범사업실적을 정밀 분석(6월까지)
 - 실시지역·축종 확대 및 사업단가·이행요건 마련(10월까지)

마. 조사료 생산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조사료 수요량은 4,100천톤으로 이중 700천톤(17%)을 수입

○ 조사료 공급 : 사료작물 등 1,200천톤, 볏짚 2,200, 수입 700

○ 초지, 사료작물포 면적 : 141천ha(초지 45, 사료포 96)

※ 초지·사료작물포 면적 : ('01) 126천ha → ('03) 137 → ('05) 141

□ 소사육두수 증가 및 축산농가의 양질조사료 이용요구 증대로
조사료 수요는 점차 확대 전망

※ 한·육우 사육두수 : ('04.12) 167만두 → ('05.12) 182 → ('06전망) 196

○ 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총체보리 재배사업 및 기계·장비 보조지원 등으로 휴경논의
사료작물 재배 확대 추세

※ 총체보리 재배면적 : ('03) 859ha → ('04) 2,681 → ('05) 6,281 → ('06.P) 9,686

- 경종농가의 벼재배 대체작물로 사료작물 재배 가능성 대두

○ 국내 부존자원 이용기술 개발로 양질조사료 공급 증가

- 볏짚을 생볏짚 곤포사일리지화하여 사료가치 증진('05년 400천톤)

□ 농경지 임차·장비 구입 부담 등으로 국내조사료 증산에 제약

○ 조사료 생산장비는 고가로 자체 구입이 어렵고, 기계화를
위한 대규모 농경지 확보 곤란

- 쌀 소득보전직불제, 생산조정제 등 시행으로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휴경지 임차가 더욱 어려운 실정

○ 소 사육농가는 이용이 편리한 수입조사료를 선호하는 경향

'06년 추진계획

-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10년까지 50천ha)
 - 겨울철 휴경농지에 사료용 총채보리·호맥 생산 확대('06 : 9,686ha)
 - 축협·한우회 등 생산자단체(연결체)에 총채보리 제조·운반비(톤당 50천원) 및 기계·장비 지원
 - 규모화된 휴경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 농지은행 등을 통해 규모화된 휴경농지를 임차하여 연중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기계·장비 우선 지원('06년 9억원)
 -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방안 강구
 - 총채벼 전용품종 개발·보급, 규모화 재배방안 등 계획 수립
 - 사료용 총채벼 시험재배 추진(농진청 '06년 10개소 28ha)
 - 조사료 생산 시범농가에 컨설팅 실시 및 현장 평가(연시)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조사료 생산·이용 교육 실시('06년 30백만원)
-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입조사료 대체 확대
 - 재배여건이 좋은 전남·북 지역의 조사료를 조건이 불리한 타지역에 공급할 경우 운송비를 지원(50% 보조)하여 생산확대 유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재 및 세제 지원 추진
 - 사료작물 종자대(47억원) 및 초지조성·보완(2억원), 생벚짚 곤포사일리지(28억원), 기반시설·장비(68억원) 지원
 -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조사료용 비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재정경제부와 협의)
- 농협중앙회, 사료협회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을 통해 수입 조사료의 품질검사 강화

4. 선진 방역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
 - AI는 태국 등에서 발생('03말/'04초)한 후, '05년 러시아·몽골(7~8월), 터키·루마니아(10월), 우크라이나(12월) 등으로 확산
 - ※ 조류인플루엔자('03.12~'04.3 발생)는 '04년 이후 국내에서 미발생, 구제역('00, '02 발생)은 '02.6월 종식 이후 청정국 지위 유지
-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평시 방역 활동을 강화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취약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3,880개) 운영
 -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한 초동 대응체계 강화
 - ※ 표준행동요령(SOP)을 보급, 조기 신고체계, 방역대 설정, 이동제한 등 조치
- 방역 시스템 미흡, 농가의식 부족 등 효율적 방역 추진 애로
 - 질병 발생 위험도·유입경로 파악 시스템 및 대책 미흡
 - 지자체장의 민선 전환 후 축산(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 및 투자 미온적(축산과 폐지 및 전문인력 축소)
 -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에볼라 등)에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 등
- 국내 고질적인 상재 질병인 소부루세라병,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닭뉴캐슬병 등은 만성적으로 농가 피해를 초래

'06년 추진계획

□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 가축질병 국내 유입 차단

○ 중국·몽골·동남아 등 악성 가축질병 상재국 운항노선 집중관리

- 검역관 증원 배치(56→81명), 검역탐지견 집중 배치(19마리)
- 전국 공항·항만(33개소)에 신발소독 카페트(400개) 설치 등

* 주요질병 발생국 및 국제기구와 세미나·정보교환 등을 통한 공조체계 유지

□ 가축질병 예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방역활동 강화

○ 주요 질병 추적조사·색출, 지자체와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

- 전국 농가 대상 혈청검사·병성감정 확대('05년 1,400→'06년 1,450천건)
- 종돈장 청정화를 통한 질병 최소화(검사항목 확대 : 3 → 5종)
 - 우선 종계장·종돈장부터 질병 비발생지역의 등급제 적용
- 살처분보상금의 지방비 부담(약 30%) 및 일부 사무의 지자체 이양
- 폐사축 랜더링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4개소, 6억원)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질병 재분류, 지자체 역할강화 등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상반기)

○ '07년 5월 공익수의사 현장 배치, '06말까지 관련법 개정

- 검역원 42명, 2개과 증설(국경검역 21명, 축산물위생 13, 동물보호 8)

○ AI 등 발생시 “가축질병위기대응메뉴얼('05.9 NSC 마련)”에 따라 관련부처와 합동 대처

□ 주요 질병별 방역대책

① 돼지만성소모성질병(4P) 종합대책 수립·추진

- 질병 피해조사 및 심한 농가 전문컨설팅(농가당 1,000천원, 160백만원)
- 종돈장 및 AI센타 질병 청정화 추진(검사 3종 → 5종)
- 돈사내 유해가스 측정을 위한 환경측정기(130기) 보급
-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예방약 지원(1,500천원, 12억원)
- 위생실태 점검표 제작·보급(상반기), 축사모델 개선안 마련

②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마련('06.2월중)

- '13년 근절목표로 단계별 감염률 감소 목표치('06년 1.5% 미만)를 설정, 감염소 색출 검사 강화('05년 : 410천건→'06 : 560) 등 추진
 - 농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원
- ※ '06년 예고 '07년 시행 : (현행) 산지가격 100%까지 → (조정) 80%까지

③ 돼지콜레라는 100% 예방접종에 치중하면서 내년에 청정화 계획 수립, 닭뉴캐슬병은 발생을 줄여 농가피해 최소화 목표

- 뉴캐슬병 발생농가 역학조사 철저,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④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11월~2월간 특별방역 추진)

- 집중관리대상지역(21개소)의 닭·오리 임상관찰(1일 2회) 강화
- * 검사 : 오리(20천건), 철새(2.4천건), 민통선 야생조류(100마리, 분변 500점)

⑤ 구제역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중국 등 발생국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 강화('05년 : 20천건 → '06 : 21)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연52회) 및 공동방제단(3,880개반) 운영(연 18회)으로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5. 한·미 FTA 대책

현 황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06.2.3 한·미 FTA 공식 출범을 선언
(제1차 협상은 5월초에 개최될 전망)
- 타국과 FTA 체결 사례를 감안할 때, 미국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전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
- 축산물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FTA 체결 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
- '03년 12월 광우병 발생 이전까지 미국산 쇠고기(관세 40%) 수입 비중 : 75%(국내 소비자들이 타국산보다 선호)
- 돼지고기(관세 25%), 닭고기(관세 20%) 수입 비중 : 각각 22.6%, 27%(2005.11월, 금액기준)
- 치즈, 유장분말, 조제분유 등 유제품의 경우 미국산은 품질 및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관세 철폐시 영향이 클 전망
- ※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영향 추정(관세 50% 감축시 ~ 관세 철폐시)
 - 수입량 증가 : 낙농제품 157~527%, 육류 등 91~215%
 - 생산액 감소(연간) : 낙농제품 142~1,110억원, 육류 등 3,380~9,031억원
- 한-미 FTA를 앞두고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

'06년 추진계획

-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은 협상시 양허제외, 관세 일부 인하, 저율관세 수입쿼터 설정,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

※ 미국은 2004년 호주와 FTA 체결시 쇠고기, 낙농제품 등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

-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KREI,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06.2월)하여 운영

- 한·칠레 FTA 피해대책 수립 경험을 토대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방안, 피해 구제 방안, 소요되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등 중점 검토

- 연말까지 진행될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 작업에 반영

- 영향 분석 및 양허안 작성, 국내대책 수립 시에 생산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

※ 축산신문 주최 한·미, 한·캐나다간 FTA 대응방향 워크숍 개최(2.10)

- 협상개시 후에는 협상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양허안 작성 등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6.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

쇠고기 수급 및 수입재개 영향

□ 국내 소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고, 한우 값은 하락세

- 소 사육두수는 '05.12월 현재 1,819천두로 '03.12월 대비 22.9% 증가하였고, '06년말 사육두수는 '05년말 대비 10% 정도 증가한 2,000천두 내외 전망

□ '06년 쇠고기 수요량은 '05년 보다 15.1% 증가한 365천톤 전망되며, 공급량도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로 증가

- 국내산은 9.9% 증가한 167천톤, 수입육은 20% 증가한 198천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물량중 상당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수입중단 전 미국산의 66% 내외를 점유하던 뼈있는 갈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한우 값은 고급육과 저급육 시장으로 양분화 전망

-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로 한우 값이 당분간 하락할 것이나, 주로 고급육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적고, 저급육이 거래되는 가축시장 거래가격은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임

'06년 추진 계획

- ☐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홍수출하 자제 및 송아지 입식자제 교육·홍보 실시(도별 1회, 8회)
 - 생산자가 납부하는 의무자조금(한우 40억원, 양돈 56)과 정부 지원금으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 실시
- ☐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중점 추진
 - '06년까지 브랜드경영체 50개를 선정('05까지 29개 선정), 규모화·마케팅 등 집중 지원('06 : 750억원)
 - '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06년 10호)를 선정, 어미소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한우개량 추진
 -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총체보리 재배 확대('06 : 9,686ha) 및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추진('06년 재배실증시험 실시: 20ha)
- ☐ 한우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 장치 및 단속 강화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 조기 확대 시행(전면 시행시기 : '09년 → '08년)
 -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552개)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07.1월)
 -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파는 행위를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단속(현재 수과원과 시·도만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내실화('06년 1,300천원) 및 가축공제 가입('05.12월말 현재 158천두)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
 - 부루세라 발생 농장 재기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적기 지급
 - 한·육우 가축공제 가입률(50% 목표)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사업 취급기관을 농협중앙회 이외에 민간보험사에 개방

<참 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추진경과

- 미국내 광우병 발생('03.12)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전문가협의회,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검증('05.2~12)
 -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높지 않고,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미국의 안전성 제도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가축방역협의회는 국제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 OIE(국제수역사무국)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발표('05)
 - 미국과 수입재개조건 등에 관한 협상개시 방침결정('05.12.19)
- 한·미 수입재개조건 협상('06.1.9~13)을 개최,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

< 1.13일 합의된 수입위생 조건 주요내용 >

- i)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ii) BSE재발 등 상황악화시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가능
- iii) 우리측 검역관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 작업장 승인
- iv)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부위) 제거
- v) 미국에서 출생·사육된 소 또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어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에 한하여 수입

7. 낙농산업발전대책

현황 및 문제점

- 녹차, 두유 등 대체음료 소비확대로 시유소비가 감소되고, 높은 원유가격에 따른 생산증가로 원유의 공급과잉 구조 지속
 - 연도별 잉여량 : ('02) 50만톤 → ('03) 36 → ('04) 34 → ('05) 33
- 원유 조달체계가 낙농진흥회를 통한 간접집유와 유업체 직접 집유의 2중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응 곤란
 - 낙농진흥회는 집유율 저조 등 문제로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
- DDA 협상·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유통 특성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시유는 경쟁력이 있으나, 유제품은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없는 실정
- '05년에 원유 공급과잉 구조 개선,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공론화 추진
 -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4회)를 통해 이해 주체별 의견 수렴 등

'06년 추진계획

-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 쟁점사항 합의 도출
 -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 집중 심의 및 조정안 마련(1~2월)
 -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에 대한 지역설명회 개최(3월)

□ 대책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로드맵 마련(3월)

- 확정된 낙농대책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단계별 시행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별도 수립
 - 낙농위원회 설치, 쿼터 표준화, 원유 거래지침, 낙농진흥법 개정(안),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등 세부과제에 대한 로드맵 마련
- 대책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낙농위원회'에서 논의 추진

□ 수급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 작업 추진('06년도중)

- 낙농위원회 설치, 원유 거래원칙 설정, 수급정보 공유방법 등 근거규정 마련

□ 낙농진흥회 집유선 직결전환 추진

- 낙농가 및 유업체 설득의 용이성·지역의 원유 배송여건을 감안, 4단계로 구분하여 직결전환 추진(3~12월)
 - 단계별 직결전환 추진계획 : (1단계, 3월) 충북 → (2단계, 5월) 강원, 경기, 충남 → (3단계, 8월) 경북, 경남 → (4단계, 12월) 전북, 전남
- 직결전환에 따른 낙농조합 총량쿼터제 운영지침 확정 통보(2월)
- 낙농조합별 유대계산 프로그램 구축(1~3월)
 - 낙농조합 총량쿼터제 시행시 조합별 유대계산과 차액지원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발·공급

8. 가축공제사업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와 사고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공제사업 지원

○ 공제가입두수 : ('04) 28,404천두 → ('05) 45,845

- 가입률(가입두수/사육두수) : ('04) 24.1% → ('05) 33.3

○ 공제금 지급액 : ('04) 199억원 → ('05) 185

<가축공제 지원 개요>

- 대상축종 : 소, 돼지, 말,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 공제료 부담률 : 농가부담 50%, 보조지원 50%

- 공제금 지급 보장 :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해 시가의 80%~100% 보상

□ 가입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축종별 가입률 편차가 큼

○ 가입률 : 소(7.4%), 돼지(57.6%), 가금(32.8%), 말(4.9%)

□ 가금에 대하여는 설해 피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05년말 폭설 피해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풍수해보험법(소방방재청)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준비 단계로 축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 축사는 특약으로 운영되며, 공제료 전액을 농가가 부담

□ 농협만 가축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경쟁체계 미흡

'06년 추진계획

- 가축공제가 농가경영안정의 주된 장치로 정착되도록 주요 가축의 가입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활성화 추진
 - 장기적으로 대상 축종을 7개 축종에서 '10년까지 15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연차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 '06년도에 사슴, 칠면조를 추가(총 9개 축종)
 - '06년도 목표 : 가입률 37%, 가입 금액 1조 7,472억원
 - 축종별 가입률 : 소 11.6%, 돼지 70.7%, 말 6.1%, 가금(닭·오리·평·메추리) 35.9%
- 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3~4월)·추진
 - 현행 가금류 공제 보장 범위(풍수재, 화재)에 설해 추가
 - 축사시설의 설해 피해 보장 및 공제로 보조 방안 검토
 - * 현재 축사는 특약으로 소, 돼지, 말에 대해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만 보상
 - 가축공제사업에 농협중앙회 외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공제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추진
 - 타 유사보험(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 보험)과의 통합문제, 가축공제 효율의 적정성, 국가 재보험 필요성 등 검토
 - 부가서비스 확대 및 사고율 저하를 위한 무료가축 진료 추진 등
 - 축사 전기 안전 무료 점검 서비스 및 가축 무료 검진사업 확대로 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력 강화
 - 안내장 배포(20만부), 재해피해 농가 보상사례 홍보 등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가축공제 가입확대 독려

<참고 : 공제금 지급 수준>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해·수해·설해등 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경추골절,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송아지:생후2개월이상 한 육우:12월~13세미만 젖소8세미만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수소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비 고
돼지	○ 질병(TGE,PED,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설해, 화재, 풍제,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 -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으로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종빈, 종모마	
가금 (닭·오리·평·메추리)	○ 화재, 풍제,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 장치 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우사, 마사, 돈사)	○ 화재, 풍제, 수재에 의한 손해 ※축사는 특약으로 정부지원금 없음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의 100%까지 보상	제한없음	

9. 축산물 수출확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05년도 돼지·닭·오리고기, 종축 등 축산물 수출액은 4천 5백만\$로 전년(3천 1백만\$) 대비 46.7% 증가
 - 돼지고기는 '00년 구제역, '04년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 검출로 인해 대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
 - 돼지고기 : ('03) 31,324천\$ → ('04) 27,333 → ('05) 34,364
 - 닭고기는 국내가격이 높아 노계 날개육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삼계탕·오리고기는 홍콩·일본지역 수출이 증가 추세
 - 닭 고 기 : ('03) 1,837천\$ → ('04) 390 → ('05) 2,296
 - 삼 계 탕 : ('03) 1,924천\$ → ('04) 1,946 → ('05) 3,520
 - 오 리 육 : ('03) 1,988천\$ → ('04) 1,137 → ('05) 3,682
 -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종돈은 작년에 베트남·필리핀에 수출 재개 (863두, 1,326천\$)
- 돈육(가열가공품)·닭고기(신선육)의 경우 대일 수출이 열려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
 - 주요 축산물 수출국들과의 FTA체결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닭고기 신선육의 수출 재개·확대 필요

'06년 추진계획

- 축산물 수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추진
 - 관련 기관·단체·업체간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분야별 애로를 발굴, 해결하고 정보 교류(1.17, 1차 협의회 개최)

□ 수출 물류비 지원을 지속하면서 중·장기적 수출 생산기반 구축 유도

- 축산부문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 ('05) 362백만원 → ('06) 400
-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조속 재개를 위해 돼지콜레라 항체 발생('04. 11월)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조기에 청정화
 - 청정화 후 일본과 수출 재개 협상 추진
- 신선 닭고기 수출을 위한 사육·가공·유통·소비구조 구축 유도
 - 규모화된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2.5kg 증체 출하 및 부분육시장 발전 방안 마련

□ 해외 식품박람회 등을 통한 수출가능 축산물 홍보 강화

- 일본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 3.14~17)에 삼계탕 및 오리고기 특별 홍보 추진
 - 한국산 가금육 판촉을 위한 홍보세미나 개최(3.15, 동경)
 - 현지 대형 유통체인·한식당을 이용한 삼계탕 판촉·홍보 행사 등
- 해외(일본·대만·홍콩)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 국내 시찰과 육가공 기술정보 교환(9월)
- 오사카식품박람회(Foodex Kansai)에 우리나라 돈육, 계육 및 가열가공품을 전시하여 판촉·홍보(10월) 등

□ 미국측의 한국산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조속 마무리 추진

-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 교포수가 일본보다 2배이상 많아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10.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가. 마필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마필산업은 1·2·3차 산업이 접목되어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잠재 산업임
 - 선진국에서는 승마, 경마 등 말관련 연관산업이 고용창출은 물론 레저, 관광과 농가의 소득산업으로 정착
- 현재는 마필생산이 860여농가에서 18,000여두의 사육에 불과하고 경마 외에는 수요가 적어 성장기반이 취약한 편
 - 연간 마필은 경마에 1,800여두, 승마(승마장 130여개)에 1,400여두가 소요되고 700 ~1,000여두가 마육으로 소비
- 승마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및 제도적 장치 등 미흡
 - 승마업 진입에 관련법의 규제로 승마장 설치 및 확장에 애로
- 제주도를 중심으로 마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90년대에 제주도에서 일본에 마육 수출('90~'97 : 마육 10.7톤)
 - 위생수준을 제대로 갖춘 도축·가공시설 미흡
 - 일본은 마육 소비량의 70%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06년 추진계획

□ 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수요기반 확대와 경마에서 승마로 이어지는 마필산업의 선 순환체계 구축

○ 승마장 시설기준 완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협의)

- 초지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 승마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농림부 장관배 전국 승마대회 신설

- 마사회 주관으로 수도권 10개교(중·고·대학생)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년중 승마프로그램 지원(인터넷 공고후 추천)
- 농림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및 국산마승마대회 신설 지원
- 지구력 경기(Endurance) 시행(제주도 등 지자체 중심 추진)

○ 농촌개발사업과 승마체험관광을 연계지원 하고 지역규모와 입지여건(임도·해안도로·자연휴양림)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승마장 육성

□ 비육마 위생수준 향상 및 대일본 비육마 수출 여건 조성

○ 마육의 품질향상(육질, 육색)을 위한 산·학·연 공동 비육 기술 연구 실시

○ 전문마육 생산을 위해 일정 생산규모를 갖춘 도축·가공공장에 시설비 지원을 통해 위생여건 개선

○ 일본 수요에 맞는 비육마를 도입(러시아, 몽고 등), 비육 후 일본에 수출하고 성과에 따라 농가에 축종 보급을 확대

나. 애견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애견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나, '02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태
 - '06년 애견시장규모(추정) : 1조 8,760억 원(매일경제 자료)
 - 사료(9천억), 의료(2.5), 용품(2), 분양(1.2), 미용(1), 기타(4)
- 산업규모는 커졌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생산·분양·매매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20개 이상의 단체 난립과 혈통증명서 남발 등

'06년 추진계획

- 혈통증명서 발급체계 등 애견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 주요 견종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애견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상반기)
 - 애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애견 산업 발전대책 마련(하반기)
 - 특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진도개 국제화 및 애견산업 저변확대 추진
 - '06년 진돗개품평회 일부 지원 : 24백만 원(진도군)
 - 공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정부의 관심분야 선택 지원
- 애견 사육 기반시설 등 지원
 - 「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축종에 애견이 포함 되도록 '07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현행 진도개만 반영)

11. 축산물 수급안정 추진

가. 양 돈

수급동향 및 전망

- 돼지 사육두수는 PMWS(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 영향으로 '0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05년에 소폭 증가
 - 사육두수(12월기준) : ('03) 9,231천두 → ('04) 8,908 → ('05) 8,962
- 지난 해 국내산 공급 감소(700천톤, 감 40)에도 불구하고 수입량(174, 증 65)이 대폭 늘어 전체적인 공급물량은 증가(874, 증 16)
 - 국내산 냉장육 부족으로 산지가격은 '04.1월이후 강세 유지
 - 연평균 가격 : ('03) 164천원/100kg → ('04) 235 → ('05) 253
- '06년 사육두수는 900만두 수준 유지, 산지가격은 년중 생산비 이상 수준에서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약보합세 유지 전망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 의무자조금을 활용, 소비홍보·농가교육 및 정보제공·조사연구사업 등 실시('06 : 106억원)
 -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TV광고 등 소비홍보
 - 국내산, 위생 및 안전성, 저지방 부위를 컨셉으로 홍보
- 자율수급조정사업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단계별 대책 수립
 - 부산물, 노폐돈의 수출확대 지원(관계자 초청, 수출물류비 지원 등)

나. 양 계

현황 및 문제점

- 닭고기·계란은 생산주기가 짧고 연중 가격진폭이 큰 반면, 단기 생산조절로 수급안정 도모가 용이하다는 잇점도 존재

※ 육계산지가격('05년) : 최고 2,018원/kg, 최저 755

※ 계란산지가격('05년) : 최고 1,356원/10개, 최저 766

- 종계 등 강제 환우(換羽)로 병아리 품질저하 및 공급과잉 초래

- 육용종계의 입식물량이 많아 금년도 육계가격 불안 예상

- 육용종계 입식물량 : ('04) 4,387천수 → ('05) 5,067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 양계자조금 활성화로 생산자 자율수급 기능강화

- 육계 의무자조금 조성(4월)을 위해 대의원회 투표(2월)를 통해 의무납부 여부 및 거출액 결정

- 산란계는 임의자조금(일정규모 이상 농가 대상) 조성 방안 마련

- 종계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및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자율 생산조절 여건 조성

- 종계D/B('05.6부터 자료입력) 및 농가에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
- 부화장 입란·발생 실적과 산란실용계 분양농가까지 자료 축적

- 농가별 D/B와 연계하여 강제환우 근절 지도·교육

-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06년 68억원) 추진

- 소비홍보, 수출촉진, 종계D/B 및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고 필요시 종계도태 등 생산조절(긴급상황에서 지원 최소화)

다. 우 유

현황 및 문제점

- 우유수급은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의 이중구조로 관리
 - 수급구조(점유비) : 낙농진흥회 27%, 일반유업체 73%(서울우유 31%)
- '05 전체 생산은 223만톤, 수요는 190만톤, **33만톤 잉여 발생**
 - 낙농진흥회는 21만톤 잉여발생으로 331억원 재정결손 발생
- 녹차, 두유 등 대체음료 소비증가 등으로 시유 소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1인당 연간 시유소비량 : ('04) 37kg → '05.P 35.2)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쿼터 초과유량에 대한 유대 인하 등 추진
 - 낙농진흥회의 **70% 유대 지급물량 폐지**, 일반유업체의 쿼터 초과량도 국제가격 수준으로 공급 유도(1~2월)
 - 낙농가에 대한 저능력우 도태 등 초과원유 생산 자제 홍보(1월)
- 우유 소비촉진 시책 적극 추진
 - 상반기에 관리위원회 구성 등 낙농 의무자조금 조성 추진
 - 학교우유 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 ('04) 초·중·고/210천명 수준 → ('05) 초·중/279 → ('06) 초·중·고/35
 - 학교 우유 급식률 제고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낙농체험 확대 등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홍보** 추진
 - 우유의 우수성을 초·중·고 교과서(8차 교육과정)에 반영 추진

IV. 관련 법률 제·개정

가. 축산법 개정(의원입법)

□ 주요내용

- 가축(총괄)개량기관, 종축등록기관 및 가축검정기관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사·중복된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심의 위원회를 축산발전심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 추진 일정

- 입안('06. 3월), 시행('07.3월)

나. 동물보호법 개정(정부입법)

□ 주요내용

- 국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및 국민의 협조 규정 신설
-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및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내용 구체화 및 범위 확대
- 법령 위반 시 벌칙 강화, 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추진일정('05년에서 계속)

- 법제처 제출('06.1), 국회 제출 : 2006년 4월

다. 사료관리법 개정(정부입법)

□ 주요내용

- 사료공장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증 기관·교육기관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GMO 사료 및 유기사료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 고시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위법으로 재 정비
- 기타 사료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추진일정

- 입안('06. 3), 입법예고(5월), 법제처 제출(9월), 국회제출(10월)

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정부입법)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분류를 현행 제1종·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조정
 - 제3종은 국내에 상재하고 전파력이 약해 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으로, 농가 자율 및 정부 지도로 방역 관리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보상금 부담 규정 신설 및 국가·시도의 가축방역 사무중 일부를 시·군·구까지 이양
- 수입금지, 살처분 조치 등 재량행위의 요건 규정이 불명확하던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

□ 추진일정

- 입안('06.4월), 입법예고(6월), 법제처 제출(7월), 국회제출(9월)

V. 성과지표 및 추진일정

1. 성과지표 측정 체계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율	○축산 전업농의 사육 비율 : (전업농 사육 두수/전체 사육두수) ×100	○'06년 목표 : 75% * ('00) 59.6 → ('05) 73.4 → ('13) 85.0	○농관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 결과로 평가(한우, 젓소 50, 양돈 1000, 양계 3 만수 이상)
②가축공제 가입률, 가입금액	○가축공제 가입률 : (총 가입두수/가입 대상 15개축종 전체사육두 수)×100	○'06년 목표 : 33.6% * ('02) 10.6 → ('04) 24.1 → ('05) 33.3 → ('07) 37.3	○가축통계자료 및 농협 중앙회 가축공제 가입 실적 집계결과
	○가축공제 가입금액 : Σ 개별 가입실적	○'06년 목표: 17,472억원 * ('02) 7,713 → ('04) 10,227 → ('05) 12,421 → ('07) 21,236	○가축통계자료 및 농협 중앙회 가축공제 가입 실적 집계결과
③브랜드경영체 사 육두수 비율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율 (브랜드경영체사육두수 /전체사육두수)×100	○'06 목표 : 한우 32%, 돼지 50% * 한우 : ('03) 17.4 →('05) 29.5 →('06) 32 * 돼지 : ('03) 41.4 → ('05) 47.7 → ('06) 50	○가축통계조사 전체사육 두수 대비 시·도에서 보고한 브랜드경영체 사육두수
④자조금단체 생산 점유비율	○Σ [(자조금단체 생산액 /품목전체생산액*100 %)] /10년 목표자조금 품목수	○'06년 목표 : 축산 43 * ('05)37→('07)45	○자조금지원대상품목수 확대와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중으로 평가

성 과 지 표	성 과 지 표 내 용	당 년 도 목 표	성 과 지 표 검 증 방 법
⑤농식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축산물 안전성 조사 잔류물질 및 미생물 위반율 : (위반건수/잔류물질 등 검사건수)×100	○'06년 목표 - 잔류물질 : 0.24% - 미 생 물 : 0.43% * 잔류물질 : ('00) 0.11 → ('07) 0.24 * 미생물 : ('00) 0.16 → ('07) 0.42	○매년 3/4분기까지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 평가 * 주요국 잔류물질 위반율('01) : 미국 0.73, 영국 0.24, 호주 0.07, 일본 0.02
⑥사육단계 HACCP 시범사업 추진	○사육단계 HACCP시범 사업 참여농가수	○'06 목표 : 10농가 * ('07) 200 → ('10) 1,000	○검역원 HACCP 지정 내용 취합
⑦쇠고기 이력추 적시스템 시범 사업 참여율	○시범사업 참여율 : 시범사업 참여두수/전체사육두수)×100	○'06년 목표 : 5.5% (100천두) * ('04) 2.4(40천두) → ('08) 78(1,400천두)	○연말 시범사업 자체 평가시 실적 집계
⑧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 건수	○국 제 공 항, 항 만 에 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검색 건수	○'06년 목표 : 21,000건 * ('00) 5,053 → ('05) 20,000	○수과원의 실적으로 평가
⑨돼지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면역 형성률	○돼지 콜레라 면역 형성률 : (면역형성/검사두수)×100	○'06년 목표: 95.5% * ('00) 96.1 → ('04) 95.4	○수과원에서 취합한 실적으로 평가
	○뉴캐슬병 예방접종율 : (항체양성농가수/검사농가수) ×100	○'06년 목표 : 88% * ('00) 64.5 → ('04) 85.7	○수과원에서 취합한 실적으로 평가

2. 주요 업무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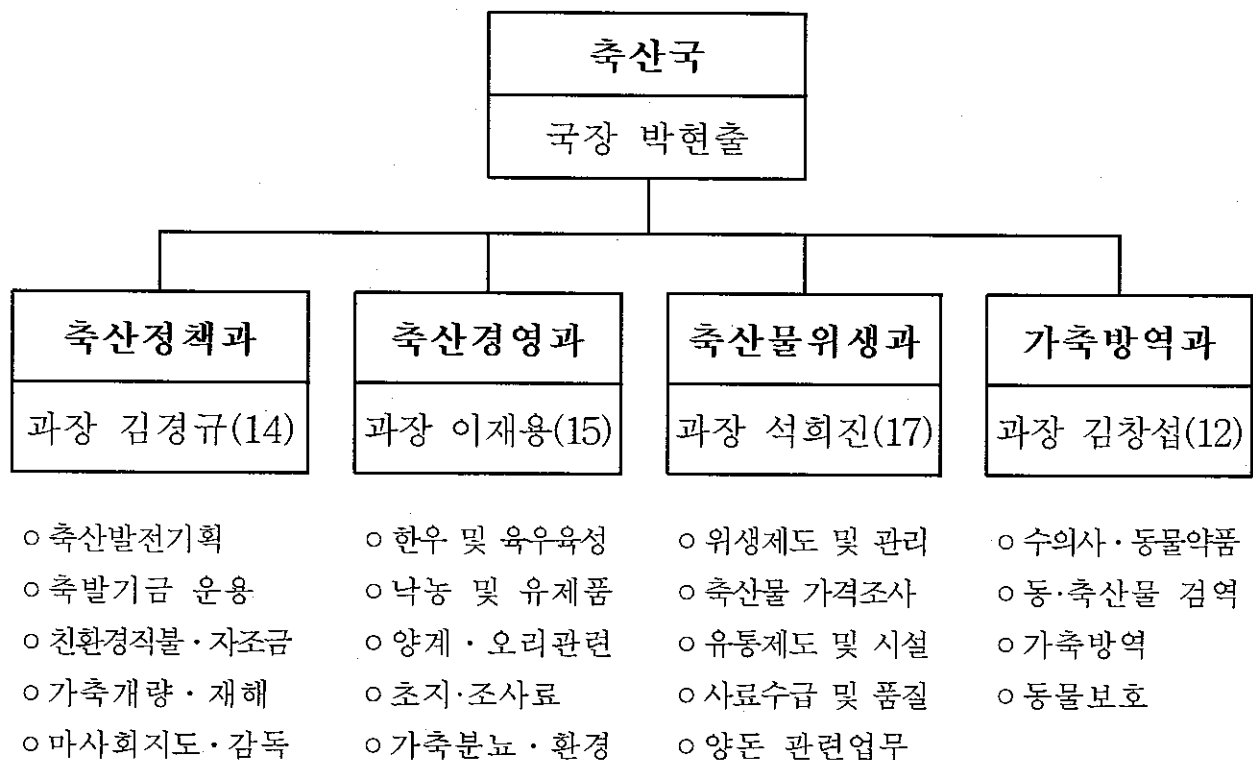
주요 업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 수립													축산물 위생과
○브랜드사업 평가시스템 개발													"
○'06년 도축장 운영자금 차등지원													"
○도축장 통폐합 사업 추진													"
○이력추적시스템 귀표 관련 문제점 개선													"
○이력추적시스템 '06년 신규 참여 대상 중점 지도점검													"
○이력추적시스템 연계사업장 지정 확대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한국HACCP인증원 설립													"
○퇴·액비 처방서 제도 활성화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 우수사례집 발간													"
○가축분뇨처리시설, 저장조 등 실태 점검 및 개선													"
○양분총량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 조사료 생산·이용 교육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축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													"
○낙농종합대책(안)에 대한 합의 도출													축산경영과
○낙농진흥법 개정 작업													"
○가축공제 활성화방안 확정													축산정책과
○쿼터 초과유에 대한 유대 인하													축산경영과
○축산물 수출 확대대책 수립													축산정책과
○검역 등 비육마 수출여건 조성													"

< 참 고 >

축 산 국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정원

□ 과별 주요 업무



□ 정원 : 59명

직 급	행정직	축산직	수의직	기능직	계
2~3급	1				1
3~4급	2	1	1		4
4~5급	11	8	6		25
6급이하	6	11	8	4	29
계	20	20	15	4	59

※ 4~5급 행정직 11명중 농업직 1명, 행정직 6급이하 6명중 전산직 1명 포함

2. 2006년도 축산부문 예산 총괄

□ '06년도 축산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1조 905억원임

- 일반·농특회계는 전년대비 31.7% 증가한 965억원
- 축발기금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9,941억원

(단위 : 백만원)

	2005 예산(A)	2006 예산(B)	증△감 (B-A)	%	비 고
□일반회계	423	541	118	27.9	
○ 축산국경상비	423	541	118	27.9	
□농특회계	72,806	95,919	23,113	31.7	
○ 시·도가축방역	20,482	21,590	1,108	5.4	• 예방주사 등 방역재료비 증액
○ 살처분보상금	10,000	30,000	20,000	200	• 보상금 증액(100억원→300)
○ 축산분뇨처리시설	33,272	34,114	842	2.5	• 분뇨처리시설(284억원→288) 및 가축분뇨유통·재활용지원(49억원→53) 증액
○ 축산물검사	3,189	3,304	115	3.6	• 검사장비구입비 등 증액(20억원→21)
○ 축산물HACCP인증지원	-	1,138	1,138	순증	• 신규사업
○ 친환경축산직불제	5,773	5,773	-	-	• 전년수준 반영
○ 국제수역사무국지역회의	90	-	△90	순감	• 사업종료
□축발기금	937,904	994,086	56,182	6.0	
<사업비>	701,976	668,322	△33,654	△4.8	
○ 축산물수급및가격안정	126,801	84,803	△41,998	△33.1	• 원유수급조절자금 감축(492억원 → 341) • 축산물수급안정사업 감축(500억원 → 257) • 송아지생산안정사업(107억원 → 67)
○ 축산물유통개선	384,463	391,230	8,767	1.7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1,707억원 → 1,782)
○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85,033	92,139	7,106	8.3	• 가축공제(209억원→246) • 축산자조사업(103억원→136)
○ 사육기반확충	105,679	100,150	△5,529	△5.3	• 사료산업종합지원(523억원 → 526)
<기금운영>	4,429	4,753	324	7.3	
<농특원리금상환>	6,900	85,700	78,800	1,142.0	
<여유자금운용>	224,599	235,311	10,712	4.8	
합 계	1,011,133	1,090,546	79,413	7.9	